

국내외 정부 온라인 간행물 디지털 납본 법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Frameworks for Digital Legal Deposit of Government Online Public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김 미 정 (Mi-Jung Kim)*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입법적 재구성 방향 |
| 2. 국내외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근거 | 5. 결론 |
| 3. 국내외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령 분석 | |

초 록

본 연구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안정적 수집·보존 및 장기적 이용 제공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규율 대상의 명시성, 납본 의무 주체와 규범 강도, 관리기관의 권한과 이행 확보 수단, 제도 운영 구조 현황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외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법률상 명시, 납본 의무 주체의 명확화, 규범 강도의 강화, 관리기관 권한과 책무의 법률상 정립, 실효적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의 마련, 제도 운영 구조 정비가 주요 개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deposit system for government online publications and to derive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o ensure the stabl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long-term availability of government online publications produc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the explicitness of the subject of regulation, the entities obligated to deposit and the strength of the norms, the authority of managing agencies and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s operational structure as analysis criteria,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posit of government online publica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areas for improvement were identified as the legal explicit specification of government online publications, clarification of the entities obligated to deposit, strengthening of the strength of norms, legal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managing agencies, provision of effective sanctions and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s operational structure.

키워드: 정부 온라인 간행물, 디지털 납본, 법정납본, 도서관법, 비교법 연구

Government Online Publications, Digital Legal Deposit, Legal Deposit, Library Act, Comparative Legal Study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수료(mjkim0503@hotmail.com / ISNI 0000 0005 3031 1982)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ISNI 0000 0000 8261 536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195-215, 2026. <http://dx.doi.org/10.4275/KSLJIS.2026.60.2.19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도서관법」 제3조 제2호는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자원도 이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법령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보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5a; 2025b).

정부간행물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생산·공표하는 간행물로서, 국민의 정보 접근과 정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한다(Larivière, 2000; Jaeger & Bertot, 2011).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2015)과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IFLA, 2014)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료의 비물질성과 소멸 가능성으로 인해 체계적 수집과 장기 보존을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간행물 역시 전통적인 인쇄물의 범주를 넘어 웹사이트, 전자문서, 온라인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국립중앙도서관, 2018), 이러한 변화는 정부간행물

의 체계적 수집과 장기적 보존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기관이 공개하는 온라인 간행물은 이용자 접근 및 장기적 공개 보존 측면에서 수집·관리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는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과 행정지침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행 「도서관법」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보존에 관한 기본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구체적인 납본 대상 범위, 제출 절차 및 운영 기준 등은 상당 부분 행정지침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수집·보존 및 접근 제공 범위가 법률과 행정지침에 분산되어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자료에 대해 장기 보존을 기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 온라인 간행물은 독립적인 법적 개념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김영식 외, 2024).

「도서관법」 제3조 제6호에 따르면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제작되는 국제표준 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이라고 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5b).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디지털 기록물 중에서 공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중심으로 「도서관법」상 납본 제도의 적용 구조와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간행물은 전통적인 인쇄물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수집·보존 및 이용 제공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UNESCO, 2015; 국립중앙도서관, 2023). 특히 정부간행물은 웹사이트, 전자문서, 온라인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국립중앙도서관, 2018), 이러한 변화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 수집과 장기적 보존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정부 온라인 간행물은 비물질성, 생성과 소멸의 속도, 디지털 환경 변화 등의 특성을 가지며(Zarndt et al., 2015), 이는 기존 인쇄물 중심의 납본 제도와 구별되는 법적·제도적 검토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과 이행 확보 수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Larivière, 2000).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정부 온라인 간행물(government online publications)'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이 온라인 환경에서 공개·배포하는 전자적 형태의 출판자료를 의미한다. 이

는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백서, 통계자료, 전자보고서 등 공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Larivière, 2000; Jaeger & Bertot,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납본 제도의 실효성은 규율 대상의 명확성, 납본 의무 주체의 특정, 명시적 규범으로서의 의무 구조, 그리고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Zarndt et al., 2015). 또한 국가별 법체계와 정책 환경에 따라 제도 운영 구조와 관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규율 대상의 명시성, ② 납본 의무 주체의 특정, ③ 규범 강도, ④ 관리기관의 권한과 책무, ⑤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 ⑥ 제도 운영 구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준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의 제도적 구조와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기능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제·개정 연혁을 검토하고, 규율 대상의 범위와 납본 의무 규정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 체계가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등 비교적 최근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관련 법령을 제·개정된 국가를 선정하여 동일한 분석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는 디지털 법정납본 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전자출판물 납본 체계

를 정비한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정부 온라인 간행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를 함께 포함하여 다양한 입법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분석 기준은 선행 비교법 연구와 국제기구의 정책 권고에서 제시된 납본 제도의 핵심 규범 요소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다(Larivière, 2000; Zarndt et al., 2015).

셋째, 국내외 법령 비교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의 구조적 특징과 운영 특성을 도출하고, 법령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저작권법 기반(호주), 문화유산 보호 중심(프랑스), 법정 납본 도서관 중심(영국), 단일 법률 체계(독일), 디지털 정부 기반(에스토니아), 공공정보접근 중심의 제도 운영 구조(뉴질랜드) 등 다양한 법체계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를 분석적 표본으로 선정하여 국내 법제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온라인 간행물 관련 법적 규정과 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이용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수집·보존 및 이용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3 선행연구

국내 연구는 주로 납본 제도 개선과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용완(2021)은 주요국 법정납본 법규 비교를 통해

해외 법제가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명시적 의무 규범으로 규율하는 반면 국내 법령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23)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체계와 납본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집 전략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영희(2024)는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수집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영식 외(2024)는 현행 「도서관법」 체계가 정부 온라인 간행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납본 제도의 법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24)은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를 통해 정부 온라인 간행물 수집이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연구는 주로 정책 운영이나 수집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법령 조문 수준에서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규범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함께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Larivière(2000)는 법정납본 입법 지침을 제시하면서 납본 대상의 정의, 납본 의무 주체의 특징, 관리기관의 권한, 집행 수단의 규정이 법정납본 제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정부정보의 수집과 접근 제공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Jaeger와 Bertot(2011)는 전

자정부 확대 과정에서 정부정보 접근 제공 기능이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정부정보 접근 보장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전자출판물이나 온라인 자료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중심으로 법령 차원의 규범 구조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정부 온라인 간행물 보존과 법정납본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IFLA(2014)는 납본 대상과 의무 주체의 명확한 법적 규정을 법정납본 제도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UNESCO(2015)는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접근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법령 비교 연구와 제도 운영 연구로 확장되었다.

법령 비교 연구에서는 Zarndt et al.(2015)이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디지털 납본 제도의 입법 구조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면서 법률 차원의 명시성이 제도의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지적하였다. De Beer et al.(2016)은 전자출판물이 온라인 환경에서 삭제되거나 접근 경로가 소멸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납본 제도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디지털 납본 제도의 거버넌스와 운영 구조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Williams et al.(2017)는 디지털 정보 표준 형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Gooding et al.(2021)는 영국의 비인쇄물 법정납본 제도를 분석하면서 법적 의무 규정과 실제 이용 가능성 사이의 구조

적 긴장을 지적하였다. 또한 Caron(2024)은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디지털 납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ergamin과 Messina(2026)는 디지털 환경에서 법정납본 제도가 협력적 보존과 접근성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디지털 법정납본 제도의 정책 운영이나 전자출판물 수집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을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법령 조문 수준에서 규범 구조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규율 대상의 납본 의무 주체, 규범 강도,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 등 법규범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도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를 법규범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주요 국가의 관련 법령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구조와 규범 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근거

2.1 국내 법령

대한민국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는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세부 기준은 행정지침 등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도서관법」은 납본 제도의 기본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독립

적인 납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수집·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업무 지침」과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지침」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2, 2025a).

현행 제도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과 행정지침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이며,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범위와 운영 기준 역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영식 외, 2024).

이러한 제도 구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관련 법률체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국내 법령 체계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에 관한 규정이 법률, 하위 법령 및 행정지침에 분산되어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도서관법 체계상 정부 온라인 간행물 디지털 납본 관련규정'과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지침상 정부 온라인 간행물 디지털 납본 운영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서관법」 및 하위법령은 온라인 자료의 정의, 납본 의무,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및 디지털 파일 제출 방식 등 디지털 납본의 기본적 규범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납본 수집 규정」, 「납본 업무 지침」 및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은 납본 대상 자료의 범위,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 공공간행물 처리 기준 및 납본 제외 기준 등 실무적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관련 지침에서는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없는 공공기관 발간자료 및 비유통자료도 수집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정부

<표 1> 대한민국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관련 법률체계

구분	법령체계명	법체계상 위상	정부 온라인 간행물 관련 내용	납본 근거 성격	제도적 특징
상위 법률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기본법	'도서관자료', '온라인 자료' 개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부 온라인 간행물에 대한 직접적·독립적 규정은 제한적	간접적 근거	디지털 납본의 기본 법적 근거
하위 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2호)	시행령	납본 대상 범위, 제출 방식 및 정부 온라인 간행물 관련 세부 기준 제시	세부 운영 근거	법률 위임 범위 내 운영
하위 법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시행규칙	온라인 자료 납본서 및 수집증명서 등 절차 중심 규정	기술적·절차적 근거	온라인 자료 납본 절차 중심
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국립중앙도서관규정 679호)	행정규칙	정부 온라인 간행물 수집 기준 및 제외 기준 포함	행정적 운영 기준	행정규칙 보완 구조
행정지침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	자체 지침	공공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및 디지털파일 납본 기준 운영	디지털 납본 운영 기준	공공간행물 중심 운영
행정지침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지침	자체 지침	웹자료·전자간행물 납본 절차 및 수집 기준 명시	절차·수집 기준	온라인 자료 수집 중심 운영

<표 2> 「도서관법」 체계상 정부 온라인 간행물 디지털 납본 관련 규정

구분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온라인 자료 정의 및 납본	제3조 제6호: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22조 제1항: 공공기관 디지털 파일 형태 납본		
도서관자료 정의	제3조 제2호: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모든 지식정보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정의		
국립중앙도서관 기능	제20조 제1항 제2호: 국내의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제15조 제2항: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저장매체·인터넷 접근 방식 규정	제5조: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규정
도서관자료 납본	제21조 제1항·제2항: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포함 납본 의무 및 공공기관 디지털 파일 납본	제15조 제1항·제2항: 온라인 자료 포함 납본 대상 및 디지털 파일 납본 방식 규정	제4조 제1항: 도서관자료 납본서 제출 규정
디지털 파일 납본 방식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 디지털 파일 형태 납본	제15조 제2항: 전송시스템, 저장매체, 인터넷 접근 방식 규정	
납본 대상 자료 범위	제3조 제2호: 온라인 자료 포함 모든 도서관자료	제15조 제1항: 전자자료·전자출판물 등·새로운 형태 기록물 포함	
공공기관 범위	제21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제15조 제4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특별법상 법인 포함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제23조 제1항: 공공기관 등이 발행·제작하는 온라인 도서 및 연속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제20조 제1항: 국제표준자료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	제4조 제1항: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발급사항
온라인 자료 납본서		제15조 6항: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	제4조 제1항: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납본서 제출
온라인 자료 수집 증명서		제16조 2항: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규정

<표 3>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지침상 정부 온라인 간행물 디지털 납본 운영 기준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 자체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 자체 규정
목적	제1조: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 세부사항 규정	I.1. 국내 생산 도서관자료를 국가장서로 등록·장기보존하고 이용서비스 제공 및 국가서지 구축에 활용	I.1.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국가 디지털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등록하여 지속적 보존 및 디지털정보서비스 제공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제3조1항: 「도서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료 납본 규정	II.2.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디지털 파일 납본 규정	I.3.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및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납본
납본 대상 자료 범위	제3조2항: 도서관자료 및 납본 제외자료 기준 규정	II.7. 공공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포함	II.1.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음성·영상·이미지자료 및 웹사이트 포함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 자체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 자체 규정
온라인자료 수집방식	제5조3항: 온라인 자료 반송·삭제 및 처리 규정	I.2. 전송시스템 및 디지털 파일 제출 중심 운영	II.2. 납본·자체수집·수증 방식 병행 운영
납본 제외 자료	제3조2항: 공중 배포 목적이 없는 자료, 광고 중심 자료, 제한된 이용 자료 등 제외 가능	I.6. 납본 불가자료 및 비공개 자료 처리 기준 운영	I.3.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의 경우 보도자료·홍보자료·단순 발표자료·비밀자료·개인정보 포함 자료 등은 원칙적으로 납본 제외 대상으로 규정
공공간행물 관련 내용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 발행 자료 납본 처리 규정	II.4. 정부·공공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수집 운영 연감, 백서, 통계집, 조사보고서 등 공공간행물의 수집·보존 기준 운영	I.1. 도서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발행·제작되는 온라인 자료 및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을 납본 수집한다.
회색문헌 관련 내용	비유통자료 납본 처리규정	II.5.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발표자료집, 팸플릿자료 등 회색문헌 수집 운영	III.1. 공공간행물의 경우 인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 파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자료도 수집
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적용	II.5.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발표자료집, 팸플릿자료 등에 대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또는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주요 수집 대상으로 규정	I.3.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온라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되, 미부여 자료도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 수집 가능
수집·보존 기능	제3조2항: 납본자료 처리·보상 및 반송 규정	I.1. 국가장서 등록·보존 및 이용 제공	I.1.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한 대국민 디지털정보 서비스 제공

온라인 간행물의 디지털 납본이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자료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각국의 디지털 납본 제도가 납본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 제재 구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국외 법령

각국의 디지털 납본 제도는 납본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 제재 구조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Larivière, 2000). 또한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본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다(De Beer et al., 2016).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를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Zarndt et al., 2015), 국가별 법체계와 정책 환경에 따라 규율 방식과 운영 구조에 차이를 보인다. 반면 대한민국은 법률과 행정지침이 병행되는 구조 속에서 정부 온라인 간행물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김영식 외, 2024). 즉, 우리나라는 법률과 행정지침 간 역할 및 운영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각 국가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를 단순한 법령 나열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체계와 정책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제도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각국의 납본 제도가 어떠한 법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납본 의무 규정 방식,

제재 구조 및 관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 제도 차이를 비교 가능한 분석 지표로 구조화하고자 한다.

2.2.1 호주

호주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출판물 유통을 규율하는 전통을 기반으로 법정 납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Copyright Act 1968」을 중심으로 법정 납본 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2016년 개정을 통해 전자출판물을 납본 대상에 포함하였다. 호주의 법률은 온라인 간행물과 전자자료를 명시적으로 규율 대상으로 설정하고, 발행기관을 납본 의무 주체로 규정한다. 또한 'must deposit'과 같은 명시적 문언을 사용하며,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 중심 구조는 발행자를 중심으로 한 명시적 납본 의무와 제재 중심의 운영 구조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연방 국가 구조와 저작권 중심 출판 규율 전통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된다.

2.2.2 프랑스

프랑스는 문화유산 보존을 핵심 가치로 하는 법체계 내에서 디지털 출판물 납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프랑스는 「Code du patrimoine」에 따라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자료를 법정 납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문화유산 보존 체계 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법률은 발행기관을 납본 의무 주체로 설정하고 'sont tenus'와 같은 명시적 표현을 통해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납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관련 하위 규정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이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문화유산으로 파악하는 접근에 기반하며, 국가 주도의 포괄적 수집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2.3 영국

영국은 법정 납본 도서관 제도를 중심으로 출판물 수집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였다. 영국은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과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을 통해 디지털 납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인쇄물(non-print works)을 납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법률은 발행기관을 납본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must deliver'와 같은 명시적 문언을 사용하며, 위반 시 벌금 제재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개별 자료 유형이 아닌 전체 출판물을 포괄하는 통합적 납본 체계를 형성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오랜 법정 납본 도서관 제도의 전통이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2.2.4 독일

독일은 단일 법률 체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납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디지털 납본 제도는 「독일국립도서관법(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G)」에 따라 디지털 출판물을 'Netzpublikationen'으로 명시하고 법정 납본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률은 납본 의무를 'abzuliefern'과 같은 명시적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납본은 독일국립도서관이 담당하며, 관련 제도는 단일 법률 체계 내에서 운

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규율 대상과 납본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단일 법률 체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납본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2.5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정부 기반이 발달한 국가로서 전자정보 자원의 수집과 관리 체계를 법률 중심으로 구축해 왔다. 에스토니아는 「Legal Deposit Copy Act」를 통해 디지털 출판물을 법정 납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행기관을 납본 의무 주체로 설정한다. 법률은 'shall submit'와 같은 명시적 의무 규정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납본은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정부 온라인 간행물 수집 체계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자정부 기반의 행정 환경과 연계되어 디지털 납본 제도가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2.2.6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을 중시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납본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뉴질랜드는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에 따라 전자문서를 납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발행기관을 납본 의무 주체로 규정한다. 법률은 'must deposit'과 같은 명시적 의무 규정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제재가 부과된다. 납본은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정부 온라인 간행물 수집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법률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 이는 편리한 이용 보장이 라는 정책적 가치가 납본 제도 운영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는 각 국가의 법체계와 정책적 배경에 따라 납본 제도의 운영 방식과 규정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주요 국가들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법정 납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본 의무와 제재 구조를 함께 운영하는 공통적 특징을 보이며, 이는 법률과 행정지침이 병행되는 국내 제도 구조와 비교되는 측면을 가진다. 이를 종합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국내외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의 이행 수준을 법률상 명시성, 의무 주체, 명시적 의무 규정 문언, 제재규정 및 하위규정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영 구조 비교

국가	법적 근거(조문 단위 명시)	제·개정시기/관리기관	출처	핵심특징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법」 제20조(국립중앙도서관업무), 제21조(납본)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3 제정 → 2022 전면개정(현행 기준) 국립중앙도서관(OASIS 등 온라인 수집 시스템 운영) 	「도서관법」(법률 제19592호),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9호).	행정지침 중심 운영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pyright Act 1968 ss. 201-20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8 제정 → 2016 개정(디지털 납본 포함)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NED 	Australia, Copyright Act 1968, Compilation No. 64.	명시적 의무 규정 운영

국가	법적 근거(조문 단위 명시)	제·개정시기/관리기관	출처	핵심특징
프랑스	• Code du patrimoine arts. L131-2, L132-2	• 2004 법전 통합 → 2006 개정 (전자자료 포함)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France. Code du patrimoine. Ordonnance n° 2004-178 du 20 février 2004.	법률상 디지털 자료 명시
영국	•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ss 1-7; •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	• 2003 제정 → 2013 개정 (비인쇄물 규정) • British Library 등 6개 법정납본도서관	United Kingdom.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Chapter 28. United Kingdom.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 SI 2013/777.	비인쇄물 포함 운영
독일	•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DNBG) §§ 3, 14	• 2006 제정 → 2017 개정 • Deutsche Nationalbibliothek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DNBG). Germany. Gesetz über die last amended Sept. 1, 2017.	단일 법률 기반 운영
에스토니아	• Legal Deposit Copy Act §§ 2-6 (electronic publications included)	• 1997 제정 → 2017 개정 (디지털 포함 강화) • National Library of Estonia	Estonia. Legal Deposit Copy Act (Säilituseksemplari seadus). RT 1.	디지털 자료 법률상 규정
뉴질랜드	•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ss. 31-36; • National Library Requirement (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	• 2003 제정 → 2006 개정 (전자자료규정) •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Nmplari seadus), RT Iew Zealand.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No. 19. New Zealand. National Library Requirement (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	전자문서 납본 운영

〈표 5〉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규범 구조 비교

국가	법률상 직접 명시	납본 의무 주체 명시	의무규정 문언	제재 규정 적용 여부	디지털 특화 하위규정	이행 수준
대한민국	△ 없음(도서관자료에 간접 포함)	△ 정부기관 직접 명시 없음	“납본하여야 한다” (일반 규정)	△ 정부 온라인 간행물 특화 제재 없음	△ 행정지침 보완	제한적
호주	✓ Electronic publications 명시	✓ 발행자에 정부 포함	must deposit	✓ 벌금	✓ Regulations	높음
프랑스	✓ 전자·웹자료 명시	✓ 공공기관 포함	sont tenus	✓ 행정·형사 제재	✓ Décret 존재	높음
영국	✓ Non-print works 명시	✓ 발행자에 정부 포함	must deliver	✓ 벌금	✓ 2013 Regulations	높음
독일	✓ Netzpublikationen 명시	✓ 공공기관 출판물 포함	abzuliefern	✓ 과태료	✓ 시행규정	높음
에스토니아	✓ Digital publications 명시	✓ 국가기관 포함	shall submit	✓ 행정 제재	✓ 정부 규정	높음
뉴질랜드	✓ Electronic documents 명시	✓ Crown publications 포함	must deposit (제출하여야 한다)	✓ 벌칙	✓ Electronic Notice	높음

△는 법률상 명시성, 납본 의무, 제재 및 하위 규정 등이 일반적·간접적으로 규정되거나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는 해당 요소가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표 5〉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제한적인 반면, 주요 국가들은 법률상 규정과 납본 의무, 제재 구조를 결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자료의 범위, 납본 의무 주체 및 제재 규정을 법률 또는 하위규정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디지털 납본 제도의 규범 구조와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주요 규범 요소를 분석하였다.

3. 국내외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령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규범 구조를 분석 기준으로 검토한다. IFLA는 법정납본 입법 시 납본 대상의 명확한 정의, 의무 주체의 특정, 관리기관의 권한 및 집행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Larivière, 2000). UNESCO 또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접근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UNESCO, 2015). 한편 Zarndt et al.(2015)은 주요 국가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법적 기반과 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De Beer et al.(2016)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이동성과 소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납본 제도의 실효성이 법적·제도적 틀과 이행 확보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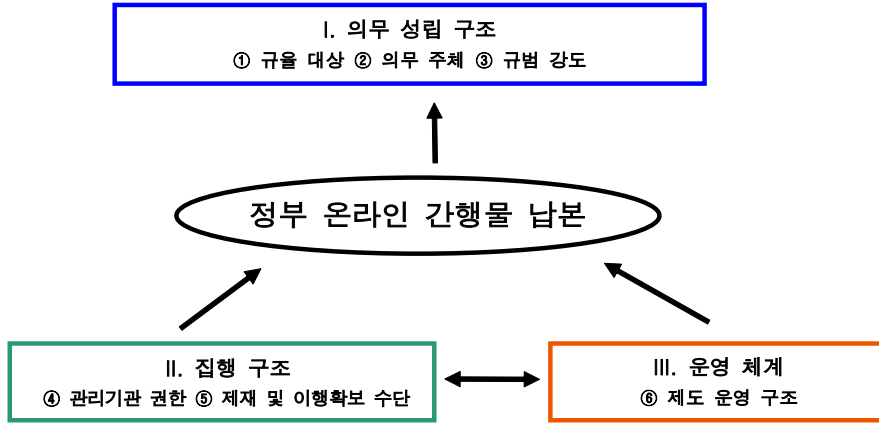
하였다.

이러한 선행 논의를 종합하면,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분석은 규율 대상의 명확성과 의무 주체의 특정(Larivière, 2000), 납본 의무의 법적 구속력과 이행 확보 수단(De Beer et al., 2016), 관리기관의 권한과 집행 구조(Larivière, 2000), 그리고 제도 운영 구조와 관리 방식(Zarndt et al., 2015; UNESCO, 2015)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온라인 간행물은 비물질성과 유통 경로의 다변화로 인해 전통적 인쇄자료와는 다른 법적·제도적 환경을 형성하므로, 납본 제도 역시 단순한 수집 절차를 넘어 법적 구성요소 간의 연계와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법적 구조를 ‘의무의 성립-집행-체계적 연계’의 삼단 구조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① 규율 대상의 설정, ② 납본 의무 주체의 특정, ③ 규범 강도, ④ 관리기관의 권한과 책무, ⑤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의 존재 여부, ⑥ 제도 운영 구조 검토 등의 여섯 가지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6년 5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대한민국 및 비교 대상국의 관련 법령이다.

주요 국가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를 분석하여 법체계 내에서 구성한 구조적 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각 국가의 디지털 납본 관련 법률 조문은 국가별 법령 체계에 따라 상이하나,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규율 방식, 납본 의무 구조, 제재 체계 및 제도 운영 구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표 6〉 참조).



<그림 1>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구조 분석 틀

<표 6> 주요 국가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 구조 비교

국가	규율 대상 명시성	납본 의무 주체	규범 강도	관리기관 권한	제재·이행 수단	제도 운영 구조
대한민국	도서관자료 개념에 간접 포함	발행기관 (출판자 개념 적용)	일반 규정 중심	국립중앙도서관	정부 온라인 간행물 특화 제재 없음	도서관법 중심운영
호주	Electronic publications 명시	발행자	must deposit (제출하여야 한다)	National Library + NED	벌금	저작권법 기반
프랑스	전자·온라인 자료 명시	발행자	명시적 의무 규정 (sont tenus)	BnF 중심	행정·형사 제재	문화유산법 체계 통합
영국	Non-print works 명시	발행자	must deposit	British Library 등 6개 납본도서관	벌금 및 민사 집행 가능	법률-하위 규정 연계
독일	Netzpublikationen (온라인간행물) 명시	발행자	명시적 의무 규정 (abzuliefern)	Deutsche Nationalbibliothek	과태료	국립도서관법 체계
에스토니아	Digital / web publication 명시	발행기관	shall submit	National Library of Estonia	행정 제재	단일 법률 구조
뉴질랜드	Electronic documents 명시	발행자	requirement notice 기반	National Library of NZ	벌금	국립도서관법 기반

본 표는 주요 국가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를 규율 대상, 납본 의무, 규범 강도, 제재 체계 및 제도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법적 구조를 분석 기준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3.1 납본 대상의 설정과 법률상 명시성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법적 구조를 비교함에 있어 규율 대상의 법률상 명시 여부는 핵심적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다(Zarndt et al., 2015).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자료의 소멸 가능성은 법률 차원의 명확한 제도 설계

필요성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De Beer et al., 2016).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독립적인 법적 개념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도서관자료' 또는 '전자자료' 개념에 포함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김영식 외, 2024).

3.2 납본 의무 주체의 설정 방식

납본 제도의 실효성은 납본 의무 주체가 법률상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Zarndt et al., 2015). 해외 주요국은 발행자 또는 정부기관을 납본 의무의 직접적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용완, 2021). 반면 우리나라는 발행자 중심의 전통적 규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생산·유통 구조와의 연계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영식 외, 2024).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납본 책임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한 해석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3.3 납본 의무 규정 방식과 운영 구조

규범 강도는 납본 의무가 일반적·원칙적 수준에서 규정되는지,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명시적 규범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 국가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를 비교·검토한 연구는 국가별로 납본 의무의 법적 표현 방식과 규범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Zarndt et al., 2015). 또한 정부 온라인 간행물은 온라인 환경에서 삭제되거나 접근 경로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납본 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적·제도적 틀과 이행 확보 장치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다(De Beer et al., 2016). 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납본 제도는 법률에 의한 명시적 의무 규정보다는 행정지침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납본 의무의 법적 규정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실제 운영 기준과 집행 구조는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관리기관의 권한 및 책무 규정

해외 주요국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의 관리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집·보존·접근 제공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Zarndt et al., 2015). 또한 국립도서관의 법적 지위와 장기보존 및 접근 제공 기능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IFLA, 2014). 반면 대한민국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관련 기본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수집·보존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행정지침에 의해 보완되는 구조를 보인다.

3.5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

제재 규정은 납본 의무의 운영 구조와 관련된 요소로서 규범 강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De Beer et al., 2016). 해외 주요국은 과태료, 벌칙, 제출 명령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포함함으로써 납본 의무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

고 있다(Zarndt et al., 2015).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국립중앙도서관, 2024).

3.6 제도 운영 구조와 관리 방식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는 국가별 법률 체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보인다. 조용완(2021)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디지털 납본의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수집·보존 및 접근 제공과 관련된 기준이 법률과 행정지침에 병행되어 운영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운영 범위와 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해외 주요국의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는 규율 대상의 명확성, 책임 주체의 특정, 납본 의무 구조, 관리기관의 권

한 설정,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 제도 운영 구조 등을 법률 차원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가 법률과 행정지침에 의해 보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규율 대상, 납본 의무 주체, 관리기관 권한,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 등이 여러 규범 체계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를 규율 대상 설정, 집행 구조 및 제도 운영 구조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7〉 참조).

4. 입법적 재구성 방향

대한민국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의 구조적 특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제도를 법률상 명시성, 납본 의무 규정 방식, 제재 및 집행 구조 등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제 I 유형은 정부 온라인

〈표 7〉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 6개 분석 기준 종합표

분석 기준	핵심 질문	대한민국	예시국가공동
규율 대상의 법률상 명시성	정부 온라인 간행물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가	△ 간접 규정	○ 법률에 명시
납본 의무 주체의 특정	누가 납본 책임을 부담하는가	△ 부분 규정	○ 발행자·정부기관 명확
납본 의무 규정의 규범 강도	명시적 규범인가, 선언적 규정인가	△ 일반 규정 중심	○ 명시적 규범
관리기관의 권한·책무	수집·보존·접근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가	△부분 규정	○ 법률상 명확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	불이행 시 제재가 존재하는가	△ 제한적	○ 벌칙·과태료 등
제도 운영 구조	운영체계와 관리 기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가	△ 법률·행정지침 병행 운영	○ 법률 중심 운영 구조

○: 관련 요소가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관련 요소가 일반적·부분적으로 규정되거나 행정지침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여 운영되는 경우

간행물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무적 규정과 집행 수단을 결합한 구조, 제Ⅱ 유형은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나 디지털 특화 규율 또는 집행 구조가 부분적 수준에 머무는 구조, 제Ⅲ 유형은 법률상 직접 명시 또는 디지털 특화 규율이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적 보완과 병행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규범 구조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틀로서, <표 8>과 같이 정리된다.

<표 8>은 <표 7>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 6개 분석 기준 종합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법제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 기준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4.1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법률상 명시 규정 도입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법률상 규율 대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에 대한 직접적·독립적 규정 보다는 일반 규정과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법」상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범위와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공표하는 웹사이트, 전자문서, 온라인 보고서 등 공개형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현행 납본 제도와의 연계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8>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유형별 규범 구조 비교

국가	규율 대상 명시성	납본 의무 주체	납본 의무 규정	관리기관 권한	제재·이행 수단	제도 운영 구조
대한민국	정부 온라인 간행물 관련 간접 규정 중심 (Ⅲ)	발행자 중심, 정부 기관 적용 범위 부분 규정 (Ⅲ)	일반 규정 중심 (Ⅲ)	법률상 근거 존재, 디지털 특화 규정 일부 운영 (Ⅱ)	관련 제재 규정 일부 운영 (Ⅲ)	법률·행정지침 병행 운영 구조 (Ⅱ-Ⅲ)
호주	정부 온라인 간행물 법률상 포함 (Ⅰ)	발행자 직접 의무 (Ⅰ)	명시적 의무 규정 + eDeposit 체계 (Ⅰ)	국립도서관 중심 협력 체계 (Ⅰ)	법률상 제출 의무 및 제재 (Ⅰ)	연방-주 협력 구조 운영 (Ⅰ-Ⅱ)
프랑스	디지털 출판물 명시 규정 (Ⅰ)	발행자·온라인 배포자 의무 (Ⅰ)	명시적 규율 구조 (Ⅰ)	BnF 법률상 권한 명시 (Ⅰ)	법률상 제재 구조 포함 (Ⅰ)	문화유산법 체계 내 통합 규율 (Ⅰ)
영국	정부 온라인 간행물 법률상 명시 (Ⅰ)	발행자 직접 의무 (Ⅰ)	명시적 제출 의무 (Ⅰ)	British Library 중심 법정 권한 (Ⅰ)	법률상 제재 및 집행 구조 존재 (Ⅰ)	단일 법체계 중심 운영 (Ⅰ)
독일	모든 출판물에 디지털 포함 (Ⅰ)	발행자 직접 의무 (Ⅰ)	법률상 의무 규정 (Ⅰ)	Deutsche Nationalbibliothek 권한 명시 (Ⅰ)	제출 의무 불이행 제재 가능 (Ⅰ)	단일법 중심 체계 (Ⅰ)
에스토니아	디지털 출판물 법률상 명시 (Ⅰ)	발행자 직접 의무 (Ⅰ)	명시적 의무 규정 (Ⅰ)	국립도서관 권한 명확 (Ⅰ)	법률상 제출 의무 및 제재 (Ⅰ)	통합법 체계 운영 (Ⅰ)
뉴질랜드	전자문서 명시 포함 (Ⅰ)	발행자 직접 의무 (Ⅰ)	명시적 의무 규정 (Ⅰ)	국립도서관 권한 명시 (Ⅰ)	법률상 제출 명령 구조 (Ⅰ)	단일 법률 중심 운영 (Ⅰ)

Ⅰ: 법률상 명시, 납본 의무 규정, 집행·제재 구조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정된 유형
 Ⅱ: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나 디지털 특화 규율 또는 집행 구조가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유형
 Ⅲ: 법률상 직접 명시 또는 디지털 특화 규율이 일반적·간접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형

4.2 납본 의무 주체의 명확화

해외 주요국의 경우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을 납본 의무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발행자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제출 범위와 적용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공개 및 제공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도서관법상 납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개용 온라인 자료의 범위와 제출 절차를 보다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납본 제도와 온라인 자료 수집 지침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제출 기준 및 운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4.3 납본 의무 규정 방식의 정비

해외 주요국에서는 납본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 의무 규정으로 두고 집행 수단을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의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주로 하위 기준과 운영 지침을 통해 보완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에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의무의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지침은 보완적 운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법」에 정부 온라인 간행물에 대한 납본 의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명시하고, 납본 기한·제출 방식·파일 형식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안정적 수집을 위해 현행 온

라인 자료 수집 관련 행정지침을 보완하고, 제출 대상·형식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4.4 관리기관의 권한과 책무의 법률상 정립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납본의 관리기관과 그 권한·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권한은 존재하나 정부 온라인 간행물에 특화된 법률상 정립은 일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수집·보존·접근 제공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서관법」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의 관리기관으로 명시하고,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수집 요구권, 보존·복제 및 형식 변환 권한, 접근 제공 책임 등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권한과 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5 단계적 이행 지원 및 확보 수단 검토

해외 주요국은 과태료, 벌칙, 제출 명령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통해 납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에 대한 단계적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를 보인다. 위반 정도에 비례한 단계적 검토 또는 행정적 유인 장치를 도입하여 납본 의무의 이행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납본 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보

상급 지급, 표준식별번호(ISBN/ISSN) 부여 지원 등 행정적 유인 장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행 확보 수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4.6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제도 운영 구조 검토

정부 온라인 간행물은 생산·관리·공개 방식의 특성상 다양한 제도 운영 구조와 관련될 수 있다. 특히 공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자료는 수집·보존 및 접근 제공 과정에서 운영 기준과 관리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디지털 납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운영 기준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운영 체계는 공개 및 이용을 위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접근 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집 대상 범위, 제출 절차, 보존 방식 및 접근 제공 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상 디지털 납본 체계와 행정지침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법적 구조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대한민국과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에스토니아, 뉴질랜드의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규율 대상의 명시성, 납본 의무 구조, 규범 강도, 관리 기관 권한과 책무,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 제

도 운영 구조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주요국은 정부 온라인 간행물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본 의무 및 제재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관련 규범 요소가 일반적·간접적으로 규정되고 상당부분 행정지침에 의해 보완되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운영 방식이 국가별 법체계와 규범 구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법률상 명시, 납본 의무 주체의 명확화, 납본 의무 규정의 법률 중심 정비, 관리기관 권한과 책무의 정립, 제재 및 이행 확보 수단 마련, 제도 운영 구조 정비를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기존 법정납본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과 국내 법체계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정부 온라인 간행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장기적 보존을 위한 관련 제도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법령 텍스트를 중심으로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비교법 연구로서, 제도의 실제 운영 실태와 정책적 효과까지는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운영 구조와 이행 체계를 중심으로 실증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외의 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정부 온라인 간행물 납본 제도의 운영 체계와 법적 기반의 연계 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원 보존전략 수립 연구(11-137109-000181-01).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과 (2022).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
출처: <http://www.oak.go.kr/nl-ir/handle/2020.oak/739>
- 국립중앙도서관 (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24).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25a).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79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관리 (2025b).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
- 김영식, 정유경, 이영미 (2024).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노영희 (2024).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및 활용 방안 도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1-28.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1>
- 대한민국.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대한민국.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2호.
대한민국.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 조용완 (2021). 주요국의 법정납본 법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369-393.
<https://doi.org/10.16981/kliss.52.3.202109.369>
- Australia. Copyright Act 1968. Compilation No. 64.
- Bergamin, G. & Messina, M. (2026). Digital legal deposit: Cooperation, preservation, and new access opportunities.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45-68.
<https://doi.org/10.36253/jlis.it-697>
- Caron, B. (2024). The BnF data-driven policy for legal deposit of born-digital. *Proceedings of the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reservation (iPRES 2024)*, 154-167.
<https://www.digipres.org/publications/ipres/ipres-2024/papers/the-bnf-data-driven-policy-for-legal-deposit-of-born-digital-sou/>
- De Beer, M., Van der Merwe, M., Ball, L., & Fourie, I. (2016). Legal deposit of electronic books-a review of challenges faced by national libraries. *Library Hi Tech*, 34(1), 87-103.
<https://doi.org/10.1108/LHT-06-2015-0060>
- Estonia. Legal Deposit Copy Act. RT I.
- France. Code du patrimoine. Ordonnance n° 2004-178 du 20 février 2004.

- Germany.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G). (last amended Sept. 1, 2017).
- Gooding, P., Terras, M., & Berube, L. (2021). Identifying the future direction of legal deposit in the United Kingdom: the digital library futures approach. *Journal of Documentation*, 77(5), 1154-1172. <https://doi.org/10.1108/JD-09-2020-0159>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14). IFLA trend report: Riding the waves or caught in the tide? IFLA.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1095>
- Jaeger, P. T. & Bertot, J. C. (2011). Responsibility rolls down: Public libraries and the social and policy obligations of ensuring access to e-government and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Library Quarterly*, 30(2), 91-116.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1616846.2011.575699>
- Larivière, Jules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Alexandria*, 12(1), 1-9. <https://doi.org/10.1177/095574900001200101>
- New Zealand.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No. 19.
- New Zealand. National Library Requirement (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
- United Kingdom.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 SI 2013/777.
- United Kingdom.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Chapter 28.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5).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3721>
- Williams, R. D., Shankar, K., & Eschenfelder, K. R. (2017). Two views of the data documentation initiative: Stakeholders, collaboration and metadata standards creation.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1), 455-462. <https://asistdl.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pr2.2017.14505401049>
- Zarndt, F., Carner, D., & McCain, E. (2015). An international survey of born-digital legal deposit policies and practice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ng-Wan (2021). A comparative study of legal deposit law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3), 369-393. <https://doi.org/10.16981/kliss.52.3.202109.369>

- Kim, Young-Sik, Jung, Yu-Kyung, & Lee, Young-Mi (2024).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legal deposit system of library materials.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National Library of Korea Digital Resource Preservation Strategy Research (Government Publication Registration No. 11-137109-000181-01).
- National Library of Korea Online Resources Division (2022). Guidelines for Online Materials Legal Deposit and Collection. Available: <http://www.oak.go.kr/nl-ir/handle/2020.oak/739>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Online Materials Collection.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4). Strategic Planning Study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Capacity.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5a). Regulation on Collection of Legal Deposit Material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Regulation No. 679).
-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Development Division (2025b).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collection.
- Noh, Younghee (2024). A study on the collection direction and utilization strategi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online resource collection in major foreig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1-28.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1>
-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 36322).
-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Rule of the Library Ac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dinance No. 496).
- Republic of Korea, Library Act (Act No. 21090).

